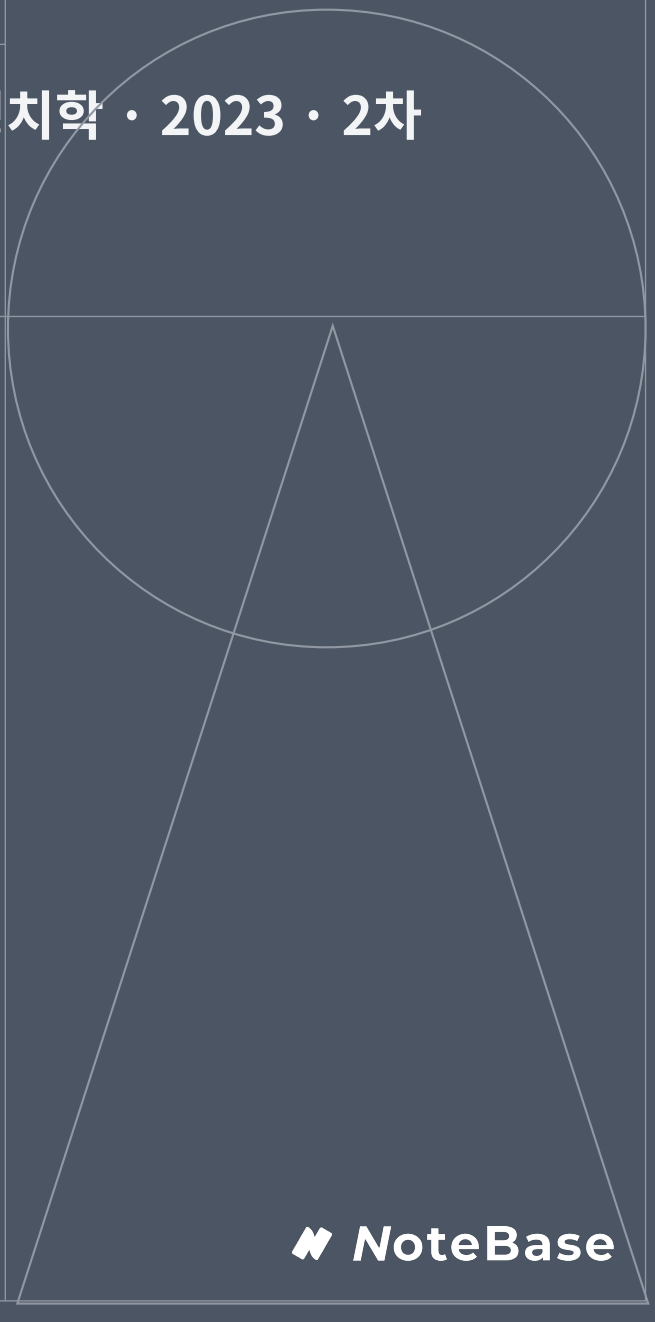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3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3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3 · 2차

문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상대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② 국가의 개입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③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④ 붕괴된 세력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 전제인 무정부성, 안보 딜레마, 합리적 국가, 세력균형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환경에서 국가가 생존과 국익을 위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본다. 안보 딜레마는 한 국가의 방어적 조치가 다른 국가에는 위협으로 보여 상호 불신과 군비 경쟁을 낳는 현상이다. 세력균형은 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막기 위해 군비 증강이나 동맹 형성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사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대국의 의도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점은 현실주의의 전형적 전제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방어적 행동도 공격 의도로 해석되어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② O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질서와 안정의 유지를 중시한다. 따라서 평화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국가 개입은 비도덕성 여부만으로 배제되지 않고, 힘의 안정과 질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③ O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가 국익과 안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산하며 행동한다고 본다. 합리적 행위자 가정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붕괴된 세력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국가는 군사력 증강 같은 내부적 균형이나 동맹 결성 같은 외부적 균형을 통해 균형을 복원하려고 한다. 현실주의는 바로 이런 균형 회복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본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세력균형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력균형을 복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현실주의는 균형 붕괴 자체보다 그 뒤에 국가들이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대응에 주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주의 문항은 먼저 무정부성, 국가 중심성, 국익, 안보, 세력균형 키워드가 보이는지 확인하면 된다. 선지가 세력균형의 형성·복원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 현실주의와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무정부성 아래 국가가 국익과 안보를 추구하며, 위협이 커지면 세력균형으로 대응한다.

NoteBase

문 2.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 협정이 아닌 것은?

①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

② 전략무기감축협정 II(START II)

③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

④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탈냉전 시기와 냉전 말기의 군비통제 협정을 연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탈냉전 시기는 대체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의 국제질서를 가리킨다. INF는 1987년 미소가 체결한 냉전 말기 협정이고, START II는 1993년, CTBT는 1996년, SORT는 2002년의 탈냉전기 협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INF는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폐기 협정으로 탈냉전 이전의 냉전 말기 협정이다. 따라서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협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번: X. START II는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탈냉전 시기에 체결되지 않은 협정'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협정이다.
3번: X. SORT는 2002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공격무기 감축 협정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정답 후보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탈냉전 이후 체결된 협정이므로 발문에 맞지 않는다.
4번: X. CTBT는 1996년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으로 탈냉전기 군비통제 틀에 속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탈냉전 시기에 체결되지 않은 협정'으로 처리하는 점이다. 실제로는 탈냉전 시기의 협정이다.

오답 포인트

INF가 핵군축 협정이라는 이유만으로 START, SORT, CTBT와 같은 시기로 묶으면 틀린다. 이 문항은 협정의 내용보다 체결 연도와 체결 주체가 미국-소련인지 미국-러시아인지의 전환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군비통제 협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체결 연도를 본다. 1991년 이전 미소 협정이면 냉전 말기, 1991년 이후 미러 협정이거나 탈냉전 질서에서 나온 조약이면 탈냉전기로 분류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INF 1987은 냉전 말기, START II 1993·CTBT 1996·SORT 2002는 탈냉전기라는 연표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3.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은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ㄴ. 동티모르에 파견된 다산부대는 한국이 최초로 파병한 평화유지군이다.
ㄷ. 군사감시단은 유엔의 특별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광범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의 정규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ㄹ. 평화 강제(peace enforcement)는 중립적 감시자로서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쟁 지역에서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를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재원 구조, 평화 강제의 의미, 한국의 PKO 참여 연혁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 공정성, 제한적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평화 강제는 안전보장이사회 명시적 권한 아래 군사력을 포함한 강제수단으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활동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각 임무별 평화유지 예산의 특별계정으로 운영되고, 예외적으로 UNTSO와 UNMOGIP 같은 군사감시단은 유엔 정규예산에서 충당된다.
한국은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최초의 PKO 부대 파병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 한국은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ㄴ: 틀린 표현은 "동티모르에 파견된 다산부대"와 "최초로 파병한 평화유지군"이다. 올바르게는 동티모르에는 상록수부대가 파견되었고, 한국의 최초 PKO 부대는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이다.

② O
ㄱ과 ㄹ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이다.
ㄱ: 한국의 PKO 참여를 위한 기본법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되었다.
ㄹ: 평화 강제는 중립적 감시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평화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적 수단과 방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활동을 뜻한다.

③ X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ㄴ: 틀린 표현은 "다산부대"와 "최초"이다. 올바르게는 동티모르 파병 부대는 상록수부대이며, 최초 PKO 부대 파병은 소말리아 상록수부대이다.
ㄷ: 틀린 표현은 "군사감시단은 특별 예산"과 "광범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정규 일반 예산"이다. 올바르게는 대다수 평화유지활동은 특별계정의 평화유지예산으로 운영되고, 군사감시단 가운데 UNTSO와 UNMOGIP는 정규예산으로 운영된다.

④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ㄷ: 군사감시단과 평화유지활동의 재원 구조를 뒤바꾼 진술이다. 일반적인 평화유지활동은 정규 일반 예산이 아니라 평화유지 특별계정으로 충당된다.
ㄹ: 평화 강제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와 중립적 감시에 머무는 평화유지와 달리, 강제력을 사용해 평화를 회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ㄴ은 동티모르 파병 부대 명칭과 한국 PKO 최초 파병 사례를 뒤섞은 진술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ㄷ은 군사감시단과 일반 평화유지활동의 예산 출처를 거꾸로 배열해 재정 구조를 혼동하게 만든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PKO 문제는 먼저 연혁, 부대 명칭, 임무 유형을 사실관계로 분리한 뒤 본다. 이어 평화유지는 동의와 제한적 무력 사용, 평화 강제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아래 강제수단 사용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재정 문제는 대다수 PKO는 특별계정, 일부 군사감시단은 정규예산이라는 예외 구조를 함께 기억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2010 PKO법 제정, 최초 PKO는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평화 강제는 강제력 사용, 일반 PKO 재정은 특별계정이다.

NoteBase

문 4.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공산 게릴라와의 내전이 계기가 되었다.

② 소련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었다.

③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공산주의자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에 맞서는 자유 진영 국가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트루먼 독트린의 성립 배경과 봉쇄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대외정책이다.
봉쇄정책은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는 미국의 냉전 전략 기조이며, 트루먼 독트린은 그 출발점이 된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트루먼 독트린의 직접 계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라 그리스 내전과 터키 문제였다.
틀린 부분은 "영국과 프랑스"이다.
올바르게는 미국이 그리스의 공산 게릴라 내전과 터키에 대한 소련의 압박에 대응해 지원에 나선 것이 계기이다.

② O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봉쇄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자유 진영 국가를 원조한다는 방향이 핵심이므로 옳다.

③ O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은 동맹 또는 우방 진영 국가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냉전식 개입을 본격화하였다.
그리스와 터키 원조는 그 대표적 출발 사례이므로 옳다.

④ O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자의 지원을 받는 무장 소수세력이나 외부 압력에 맞서는 자유 진영 국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공 진영 국가 지원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점에서 옳다.

오답 포인트

국가명을 바꿔 넣는 함정이 핵심이다. 트루먼 독트린의 배경은 서유럽의 영국·프랑스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와 터키 문제이며, 특히 그리스 내전이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트루먼 독트린 문제가 나오면 먼저 1947년, 그리스·터키 지원, 공산주의 봉쇄라는 세 요소를 대입해 본다. 선지에 영국·프랑스처럼 대상 국가를 바꿔 넣거나 봉쇄의 대상을 흐리는 표현이 있으면 오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트루먼 독트린 = 그리스·터키 지원 + 공산주의 봉쇄의 출발점이다.

NoteBase

문 5. 국가 간 경제통합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관세동맹(Customs Union)
(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다) 화폐동맹(Currency Union)
(라) 공동시장(Common Market)

① (가) → (다) → (라) → (나)
② (나) → (가)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라) → (가) → (다) → (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가 간 경제통합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출발해 관세동맹, 공동시장, 화폐동맹으로 심화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자유무역협정(나) - 회원국 사이의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지만 대외공동관세는 두지 않는 단계이다.
2. 관세동맹(가) - 역내 자유무역에 더해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3. 공동시장(라) - 상품뿐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까지 자유화하는 단계이다.
4. 화폐동맹(다) - 공동시장보다 더 깊게 통합되어 통화정책 또는 단일통화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대외공동관세의 채택이 관세동맹의 기준이고,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는 그다음 공동시장의 기준이며, 통화통합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관세동맹을 자유무역협정보다 앞에 두고, 마지막에 자유무역협정을 배치한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화폐동맹이다.
② O - 자유무역협정에서 시작해 관세동맹, 공동시장, 화폐동맹으로 심화하는 일반적 경제통합 순서를 정확히 배열하였다.
③ X - 화폐동맹을 공동시장보다 먼저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공동시장이 먼저 성립하고 그보다 더 높은 통합 단계로 화폐동맹이 온다.
④ X - 공동시장을 출발점으로 둔 점이 틀리다. 공동시장은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을 거친 뒤의 단계이며, 자유무역협정이 마지막에 올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관세철폐, 공동관세,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통화통합의 네 기준을 구분하지 않으면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공동시장과 화폐동맹의 순서를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통합 순서 문제는 관세철폐 여부 → 대외공동관세 여부 → 노동·자본 이동 자유화 여부 → 통화통합 여부의 순서로 단계 기준을 대입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FTA는 상품 자유화, 관세동맹은 공동관세, 공동시장은 생산요소 이동, 화폐동맹은 통화 공유 단계이다.

NoteBase

문 6. 웬트(A. Wendt)의 구성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정체성이 변화하여도 국가의 외교 · 안보 정책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동일시한다.

③ 로크적 문화에서는 경쟁국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분쟁 중에도 강제력의 행사는 완전히 배제된다.

④ 국제체제는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공유된 지식, 실제적인 행위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웬트의 구성주의에서 정체성과 이익의 관계, 위협 인식의 사회적 성격, 무정부 문화의 구분, 국제구조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웬트의 구성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위협 인식이 물질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체성·상호인식·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웬트는 무정부 상태를 홉스적 문화, 로크적 문화, 칸트적 문화로 구분한다.
로크적 문화는 경쟁 속에서도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화이고, 칸트적 문화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원조가 강조되는 문화이다.
국제구조는 물질적 자원, 공유된 지식, 실제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가의 정체성이 변화하여도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웬트는 정체성이 이익을 규정하고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정체성이 변화하면 국가의 이익 인식과 외교·안보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② X: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동일시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웬트의 대표 예시는 같은 핵무기라도 관계와 상호인식에 따라 위협 정도가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동일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③ X: "로크적 문화에서는 … 강제력의 행사는 완전히 배제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로크적 문화는 경쟁국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강제력의 행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칸트적 문화에 가깝고, 로크적 문화에서는 제한된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④ O: 웬트는 국제체제의 구조를 물질적 자원, 공유된 지식, 실제적인 행위 또는 실천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본다. 선지는 구성주의의 국제구조 이해를 정확히 서술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정체성과 정책을 분리하는 현실주의식 직관을 끌어들이면 틀리기 쉽다. ②는 핵무기의 수량이나 존재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웬트는 위협을 관계 속에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은 로크적 문화와 칸트적 문화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웬트 문제는 먼저 정체성이 이익을 만든다는 점, 위협은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무정부 문화가 홉스·로크·칸트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로크는 주권 인정과 경쟁의 공존이고, 칸트는 폭력 배제와 협력의 심화라는 기준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웬트는 정체성이 이익을 만들고, 관계가 위협을 만들며, 구조는 물질·지식·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NoteBase

문 7. 1894년 청일전쟁 전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국 간섭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미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일본에 타이완 및 펑후제도를 할양하였다.

③ 청나라와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각각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④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조공전례(朝貢典禮)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청일전쟁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 사건인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양군 파병, 시모노세키 조약, 3국 간섭 이후 일본의 대러 견제 노선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 패전 뒤 청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펑후 등을 일본에 넘긴 강화조약이다.
3국 간섭은 러시아·프랑스·독일이 일본의 랴오둥반도 획득을 막은 외교 개입이다.
영일동맹은 3국 간섭 뒤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1902년 영국과 맺은 동맹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미국과 동맹 조약'이다. 3국 간섭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대립에 대비해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② O: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과 펑후제도를 일본에 할양하였다.
③ O: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이 조선에 파병하였고, 일본도 이를 구실로 병력을 보내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④ O: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청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공전례와 같은 종속 관계의 관행을 폐지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오답 포인트

3국 간섭 이후 일본의 대러 전략을 묻는 문장에서 '미국'과 '영국'을 바꿔 넣는 함정이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외교 재편을 떠올리지 못하면 1번을 사실처럼 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청일전쟁 전후 문제는 '전쟁 계기인 동학농민운동 →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 → 전후 외교 재편인 3국 간섭과 영일동맹'의 순서로 놓고 보면 판단이 빨라진다. 특히 러시아 견제를 위한 일본의 동맹 상대가 영국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청일전쟁 패전은 시모노세키 조약, 3국 간섭 뒤 대러 견제는 영일동맹이다.

NoteBase

문 8. 월저(M. Walzer)가 주장한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②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 운동가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③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④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인정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월저의 전쟁 및 군사적 개입 정당화 이론에서 허용되는 예외와 허용되지 않는 체제변경 개입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월저는 국가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므로 외부의 군사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예외적으로는 침략에 대한 방어, 대표성이 입증된 분리독립 운동 지원, 대량학살 같은 극단적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반대로 다른 사회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바꾸려는 개입은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월저는 대량학살이나 노예화처럼 인간성을 파괴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인도적 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는 주민을 구출하거나 탈출시키는 개입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
2번: O. 월저는 대표성이 입증된 분리독립 운동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 지원이 그 집단의 자결권을 보조하는 성격이라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3번: O. 월저는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한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는 방어적 무력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이는 막연한 예방전쟁이 아니라 임박한 침략에 대한 선제적 방어라는 점이 핵심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인정된다'는 표현이다. 월저는 다른 사회를 더 낫게 만든다는 명분만으로 체제변경을 위한 개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바꾸려는 개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인도적 개입이나 자결권 지원 같은 예외를 넓게 일반화하면 4번처럼 체제변경 개입까지 허용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월저의 기준은 '좋은 체제로 바꿀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예외인가'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월저 문항은 먼저 자기결정권 존중이 원칙이라는 점을 잡고, 예외가 침략 대응·임박한 위협·대표성 있는 자결 지원·대량학살 저지인지 확인하면 된다. 체제개조나 가치수출 목적의 개입이면 오답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월저는 자기결정권 우선, 예외는 침략 대응·자결 지원·학살 저지, 체제변경 개입은 부정이다.

NoteBase

문 9.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료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에서는 대통령을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ㄴ.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 미 해군이 표준화된 수행절차(SOP)에 따라 봉쇄 절차를 제시한 것은 조직과정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에 해당한다.
ㄷ. 모겐소(H. Morgenthau)는 전쟁 수행과 외교정책 수행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ㄹ. 로즈노(J. Rosenau)는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를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형화한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교정책결정 모형과 대표 학자의 주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관료정치모델은 외교정책을 단일 합리행위자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 내부 행위자들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조직과정모델은 대규모 조직이 기존의 표준화된 수행절차와 조직 루틴에 따라 정책대안을 산출한다고 본다.
모겐소는 외교와 전쟁을 모두 국익과 권력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보므로 최종 목표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로즈노는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 차원으로 구분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3 · 2차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ㄹ 조합이다.
- ㄱ은 틀리다. 관료정치모델의 핵심은 대통령 1인을 최중심 행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료조직과 정책행위자의 bargaining 과정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올바르게는 "여러 행위자의 협상과 타협이 외교정책결정에 반영된다"이다.
- ㄹ은 맞다. 로즈노는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 변수를 유형화하였다.
-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 아니라 ㄴ, ㄷ, ㄹ이다.

② X
- ②는 ㄴ, ㄹ 조합이다.
- ㄴ은 맞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 해군이 표준화된 수행절차에 따라 봉쇄 절차를 제시한 것은 조직과정모델의 전형적 사례이다.
- ㄹ은 맞다. 로즈노의 외교정책결정 변수 분류와 일치한다.
- 다만 ㄷ도 맞으므로 틀린 표현은 "ㄴ, ㄹ만 옳다"는 조합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 ㄹ이 옳다"이다.

③ X
- ③은 ㄱ, ㄴ, ㄷ 조합이다.
- ㄱ은 틀리다. 관료정치모델은 대통령 중심 모형이 아니라 정부 내 여러 행위자의 권한 경쟁과 타협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틀린 표현은 "대통령을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대통령도 여러 참여자 중 하나로서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이다.
- ㄴ은 맞다. SOP에 따른 정책 제시는 조직과정모델에 해당한다.
- ㄷ은 맞다. 모겐소는 전쟁과 외교를 국익 추구의 서로 다른 수단으로 보므로 최종 목표의 동일성을 인정한다.
-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 아니라 ㄴ, ㄷ, ㄹ이다.

④ O
- ④는 ㄴ, ㄷ, ㄹ 조합이다.
- ㄴ은 조직과정모델 설명으로 맞다.
- ㄷ은 모겐소의 현실주의 설명으로 맞다.
- ㄹ은 로즈노의 변수 유형화 설명으로 맞다.
-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관료정치모델과 조직과정모델을 둘 다 정부 내부 모형으로만 외워 서로 뒤섞는 점이다. 관료정치모델은 "행위자 간 협상"이 핵심이고, 조직과정모델은 "SOP와 조직 루틴"이 핵심이다. 또한 모겐소를 단순히 전쟁론자로만 기억하면 전쟁과 외교의 목표 연속성을 묻는 ㄷ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앨리슨 모형이 나오면 먼저 "협상과 타협"인지, "표준절차와 루틴"인지부터 구분한다. 이어 학자 문제는 모겐소=국익·권력 중심 현실주의, 로즈노=외교정책결정 변수의 다층 분류로 연결하면 조합형 선택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관료정치모델=협상, 조직과정모델=SOP, 모겐소=전쟁·외교의 목표는 국익,
로즈노=개인·역할·정부·사회·체제이다.

NoteBase

문 1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안보협의체이다.

②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하였다.

③ 인도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여하고 있다.

④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아시아, 유럽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성 요소와 인도의 대외전략, 그리고 중국 견제 맥락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쿼드(Quad)는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다.
미국은 2018년에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며 전략 범위를 명확히 넓혔다.
인도는 쿼드에 참여하지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아니며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일대일로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와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O: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면서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입각하여"이다. 인도는 미국과 조약상 양자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가 아니며, 전략적 협력과 쿼드 참여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에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이다.
④ O: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인도의 쿼드 참여를 보고 곧바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쿼드 참여와 조약동맹은 다른 개념이며, ③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섞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도·태평양 전략 문제에서는 쿼드 참여 여부, 미국 군사전략 명칭 변화, 인도의 동맹 여부를 따로 분리해서 본다. 특히 인도가 미국과 협력한다는 사실만으로 조약동맹이라고 단정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쿼드는 협의체이고, 인도는 참여국이지만 미국의 조약동맹국은 아니다.

NoteBase

문 11. 국제통화 · 금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과 일본은 2016년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지 않았다.

② 국제통화기금은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SDR)을 제안하였다.

③ 1985년 플라자합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④ 일본, 중국, 미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에 합의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주요 제도와 합의의 목적, 참여 주체, 결과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IIB는 중국이 주도해 2016년 출범한 다자개발은행이다.
SDR은 IMF가 달러 중심 준비통화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특별인출권이다.
플라자합의는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서독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환율을 조정한 합의이다.
AMF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일본이 제안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실제 창설되지는 못한 구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미국과 일본은 2016년 출범한 AIIB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AIIB는 중국이 주도했고, 미국과 일본은 거버넌스와 기존 국제금융질서와의 관계를 이유로 불참했다.

② O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자국 통화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이다. IMF의 SDR은 이런 달러 중심 체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조적 국제준비자산으로 제안·도입되었다.

③ O
1985년 플라자합의는 과대평가된 달러 가치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는 평가절상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맞다.

④ X
틀린 표현은 '일본, 중국, 미국은 … AMF 창설에 합의하였다'이다. 실제로는 1997년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 구상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IMF의 반대로 공식 창설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이 함께 합의해 만든 제도는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AIIB와 AMF를 모두 아시아 금융협력 구상으로만 묶어 기억하면 ①과 ④를 혼동하기 쉽다. 또 플라자합의를 달러 평가절상으로 거꾸로 외우면 ③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금융 문항은 제도명만 보지 말고 설립 주체, 설립 여부, 목적을 먼저 분리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AIIB는 실제 출범한 개발은행이고, AMF는 제안에 그친 구상이며, 플라자합의는 달러 약세 유도라는 방향만 잡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IIB는 출범, SDR은 보완, 플라자는 달러 약세, AMF는 무산이다.

NoteBase

문 12.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본다.
ㄴ. 구성주의는 국제제도를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정체성과 이익의 구현체로 본다.
ㄷ.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ㄹ. 구조주의는 국제제도가 국제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며 빈국과 부국의 상호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의 핵심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강대국의 힘과 이익이 투영된 장치로 본다.
구성주의는 국제제도를 국가 간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이익을 구현하는 사회적 제도로 본다.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이 협력을 제도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지만, 국가와 분리된 완전한 자율성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구조주의는 국제제도가 국제자본과 중심부의 이익을 반영해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의 조합이다. ㄱ은 현실주의가 국제기구를 강대국 이익의 반영물로 본다는 점에서 맞고, ㄴ은 구성주의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이익의 구현체로 국제제도를 본다는 점에서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ㄹ을 옳다고 묶은 점이다. 구조주의는 국제제도가 국제자본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빈국과 부국의 상호 발전을 촉진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국제제도가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본다.
③ X: 틀린 부분은 ㄷ을 옳다고 묶은 점이다.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협력을 촉진한다고 보지만,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국가들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다고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ㄷ과 ㄹ을 함께 옳다고 묶은 점이다. ㄷ은 자유주의에 국제기구의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한 표현이 틀렸고, ㄹ은 구조주의를 상호 발전의 관점으로 바꿔 놓은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ㄷ과 ㄹ 모두 오답 진술이다.

오답 포인트

자유주의를 보면 곧바로 국제기구의 독립성과 평화 중재 기능을 과장하기 쉽고, 구조주의를 보면 국제경제 협력의 긍정 효과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각 이론이 국제제도를 무엇의 반영물로 보는지를 바꿔치기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제도를 누가 만들고 무엇을 반영한다고 보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현실주의는 힘,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상호작용, 자유주의는 협력의 제도화, 구조주의는 자본과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에 초점을 둔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강대국의 힘,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상호작용, 자유주의는 협력 제도화, 구조주의는 자본과 불평등 재생산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핵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②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가뿐이다.

③ 어떤 국가라도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NPT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④ 비핵국가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NPT의 비확산 기능, 핵보유국의 범위, 비핵보유국의 안전조치 의무, 탈퇴 요건과 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수평적 확산 = 기존 핵보유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로 핵무기가 퍼지는 것이다.
안전조치 = IAEA가 핵물질이 평화적 이용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NPT는 원칙적으로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획득을 막고 평화적 핵이용에는 안전조치를 붙이는 조약이다. 또 NPT상 핵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폭발시킨 5개국으로 한정된다. 탈퇴도 자유재량이 아니라 특별한 사태로 자국의 최고이익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3개월 전 통고와 사유 제시가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평적 핵 확산은 핵무기가 새로운 국가로 퍼지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설명은 맞다. NPT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핵보유국으로의 확산 방지이다.

② O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미국, 소련 계승국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국뿐이다. 조약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폭발을 한 국가만 핵보유국으로 본다.

③ X
틀린 이유는 탈퇴가 '60일 전 통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PT는 3개월 전 통고를 요구하고,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 특별한 사태가 있다는 판단과 그 사유 제시도 필요하다.
틀린 표현: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NPT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특별한 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한 국가는 그 사유를 적어 다른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3개월 전에 통고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

④ O
비핵보유국은 평화적 핵활동이라 하더라도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이는 평화적 이용 명목의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받게 하는 장치이므로 취지는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60일'과 '통고만 하면 자유롭게'라는 표현이다. 탈퇴 기간을 짧게 바꾸고, 조약이 요구하는 특별한 사태와 사유 제시 요건을 삭제해 두면 조약 문언을 대충 기억한 경우 쉽게 넘어가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군축·비확산 조약 문제는 목적, 예외, 검증장치, 탈퇴 요건처럼 조문형 요소를 먼저 본다. 특히 기간 숫자와 '할 수 있다'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함정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NPT는 5개 핵보유국 인정, 비핵보유국에는 IAEA 안전조치, 탈퇴는 3개월 전 통고와 특별한 사태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4.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제시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식량 안보
② 군사 안보
③ 보건 안보
④ 공동체 안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인간 안보의 7개 영역과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간 안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위험을 줄이는 안보 개념이다.
UNDP는 인간 안보의 영역으로 경제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 안보를 제시하였다.
구별 기준은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인가, 개인의 일상적 안전과 삶의 조건 중심인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식량 안보는 인간 안보의 7개 영역에 포함된다.
틀린 부분은 식량 안보가 인간 안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식량 안보는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② O
군사 안보는 전통적 국가안보의 대표 영역이며, 1994년 UNDP가 제시한 인간 안보의 7개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사 안보를 고른 2번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정답 선택지로 맞다.

③ X
보건 안보는 질병, 보건 서비스 부족, 건강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뜻하므로 인간 안보의 영역에 포함된다.
틀린 부분은 보건 안보가 인간 안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보건 안보는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④ X
공동체 안보는 집단 정체성, 문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영역으로 인간 안보의 7개 영역 중 하나이다.
틀린 부분은 공동체 안보가 인간 안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공동체 안보는 인간 안보의 영역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인간 안보를 안보라는 단어만 보고 군사 안보와 같은 국가안보 범주로 섞어 생각하면 2번을 고르지 못한다. 이 문항의 함정은 인간 안보가 국가의 군사적 방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폭넓은 위험을 다루는 개념이라는 점을 놓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간 안보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개인 중심 개념인지부터 본다.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처럼 인간의 삶의 조건을 지키는 항목이면 포함되고, 군사 안보처럼 국가의 대외적 방위 개념이면 제외된다.

암기 포인트

인간 안보 7영역은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이며, 군사는 전통적 국가안보이다.

NoteBase

문 15.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었다.

②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보훈 외교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다.

③ 공공외교의 중요성 대두로 외교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되었다.

④ 한국의 공공외교는 케이팝(K-pop) 등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드 파워를 중심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공외교의 법제화 시점과 공공외교의 주체·수단·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지식·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이다.
국방외교는 군사협력, 안보협력, 파병처럼 국방·안보 수단을 활용하는 대외활동이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보다 매력과 설득으로 영향력을 만드는 힘이며, 공공외교의 핵심 자원은 여기에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었다. 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되었으므로 연도 진술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평화유지군 파병, 보훈 외교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다"이다.
공공외교법은 문화·지식·정책 소통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제도화한 법이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주로 국방·안보 차원의 대외활동이므로 공공외교의 대표 사례로 묶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문화·지식·정책을 통한 대외 소통과 민관 협력형 공공외교가 제도화되었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외교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되었다"이다.
공공외교 관련 사업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선지처럼 외교부 업무를 이관받아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새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올바르게는 "외교부가 공공외교를 총괄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드 파워를 중심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이다.
공공외교는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며, 중심축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설득력 같은 소프트 파워이다.
올바르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추진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공공외교와 국방외교를 섞어 놓은 선지이고, ③은 기관명을 그럴듯하게 바꿔 혼동을 유도한 선지이다. ④는 K-pop 같은 민간 콘텐츠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외교 전체를 민간 주도·하드 파워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외교가 나오면 대상이 외국 국민인지, 수단이 문화·지식·정책 소통인지,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와 민관 협력인지, 영향력의 성격이 소프트 파워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파병·안보협력이 전면에 나오면 국방외교와의 구분을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공공외교는 2016년 법제화되었고, 외국 국민을 상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소프트 파워로 신뢰를 쌓는 외교이다.

NoteBase

문 16. 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수많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② 장차 분쟁의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

③ 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보편적 우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국제법, 평화연맹, 세계시민법의 범위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칸트: 공화정,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 세계시민법, 보편적 환대가 핵심 키워드이다.
영구평화는 하나의 세계국가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독립한 자유국가들이 연맹을 이루고 세계시민법상 제한된 방문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구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법은 상호 독립적인 여러 국가가 공존한다는 전제를 둔다. 칸트는 단일한 세계국가보다 독립국가들의 질서 있는 관계를 전제로 영구평화를 구상하였다.

② O
장차 전쟁 재개의 빌미를 숨긴 비밀조약은 진정한 평화조약이 아니다. 칸트는 이런 조약은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조약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체류를 요구할 권리"이다. 칸트의 세계시민법은 타국 방문 시 적대적 대우를 받지 않을 방문권 또는 환대권을 인정할 뿐, 타국에 머물 권리나 정주를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를 가지지만 체류를 요구할 권리까지 가지지는 않는다"가 된다.

④ O
칸트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영구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편적 우호 또는 환대의 원리는 국가 간 평화질서를 보완하는 세계시민법의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방문권과 체류권을 일부러 붙여 놓은 선지이다. 칸트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 금지와 제한된 환대를 말했지, 정주나 체류를 청구할 권리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칸트 문제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하면 정리가 된다. 국가 간 질서는 세계국가가 아니라 자유국가들의 연맹인지, 세계시민권은 방문권인지 체류권인지, 평화조약은 전쟁 재개의 단서를 숨기지 않은 진정한 평화조약인지로 나누어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칸트는 공화정, 평화연맹, 방문권의 사상가이며 체류권까지 인정한 사상가는 아니다.

NoteBase

문 17.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참여 주체이다.

② 2016년부터 시행하여 2025년까지 실현하기로 하였다.

③ 빈곤 종식, 성평등 달성,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SDGs의 적용 범위와 이행 기간, 핵심 목표, 5대 지향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DGs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보편적 발전 의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함께 이행하는 17개 목표 체계이다.
핵심 키워드는 보편성, 17개 목표, 2016~2030, 5P이다.
5P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SDGs는 개발도상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하는 보편적 목표 체계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2025년까지"이다. SDGs의 이행 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이므로, 올바르게는 "2016년부터 시행하여 2030년까지 실현하기로 하였다"이다.
③ O. SDGs에는 빈곤 종식, 성평등 달성,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가 모두 포함되므로 옳다.
④ O. 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그 이전 개발 의제를 기간에서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목표 내용은 익숙해도 이행 종료 시점을 2025년처럼 잘못 기억하게 만드는 데 있다. SDGs의 기준 연도는 2030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개발 의제를 묻는 문제는 적용 대상이 개발도상국만인지 전 세계 공통인지, 이행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대표 목표와 5P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SDGs는 모두의 목표이며, 기간은 2016~2030이고, 방향은 5P이다.

NoteBase

문 18. 일본의 외교 · 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국과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②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미국과 안보 조약 개정을 통해 상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③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여 평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④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총리별 외교·안보 정책의 대표 조치와 시기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다나카 가쿠에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총리이다.
기시 노부스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미일동맹의 상호성 강화를 추진한 총리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방위비 증액과 미일동맹 강화를 내세운 총리이며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의 창시자가 아니다.
사토 에이사쿠: 비핵 3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안보정책의 상징으로 만든 총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다나카 가쿠에이는 1972년 중국과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본의 대중 관계 정상화를 이끈 대표 조치와 인물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

② O
기시 노부스케는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1960년에 개정하여 일방적 성격이 강했던 기존 체제를 상호협력과 공동방위의 형태로 바꾸었다. 상호 방위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여 평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연결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사토 에이사쿠가 1967년에 제시한 것이며, 나카소네는 오히려 방위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한 인물이다. 올바르게는 '사토 에이사쿠가 무기수출 3원칙을 제시하였고,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방위력 강화 노선을 추진하였다'가 된다.

④ O
사토 에이사쿠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천명하였다. 비핵 3원칙과 사토 에이사쿠의 연결은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무기수출 3원칙, 비핵 3원칙, 적극적 안보노선처럼 비슷한 안보 용어를 서로 다른 총리에게 뒤섞어 놓은 점이다. 특히 ③은 나카소네의 보수·안보 강화 이미지를 평화주의 조치와 잘못 연결하면 쉽게 속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외교·안보사 문제는 총리 이름만 보지 말고 대표 정책을 먼저 대응시키면 판단이 빨라진다. 다나카는 중일 수교, 기시는 안보조약 개정, 사토는 비핵 3원칙, 나카소네는 동맹 강화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다나카=중일 수교, 기시=안보조약 개정, 사토=비핵 3원칙, 나카소네=동맹·방위력 강화이다.

NoteBase

문 19.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개성공단 폐쇄
(나) 북한의 6차 핵 실험
(다) 핵무력정책법 채택
(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라) → (가) → (나) → (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북한 핵 문제 관련 사건의 연도를 정확히 구분하고, 특히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가) 개성공단 폐쇄 - 2016년 2월 10일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2. (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 2016년 3월 2일에 채택되었다.
3. (나) 북한의 6차 핵 실험 - 2017년 9월 3일에 실시되었다.
4. (다) 핵무력정책법 채택 -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왜 이 순서인가: (가)와 (라)는 모두 2016년 사건이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2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3월이므로 (가)가 먼저이다. 이후 2017년 6차 핵 실험이 오고, 2022년 핵무력정책법 채택이 가장 나중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 (나)를 (라)보다 앞에 두었다.
- 이유: 북한의 6차 핵 실험은 2017년 9월이고,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16년 3월이므로 6차 핵 실험이 더 나중이다.
- 올바르게는: (가) → (라) → (나) → (다)이다.

② O
- 이유: 개성공단 폐쇄(2016.2.10)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2016.3.2), 그다음 북한의 6차 핵 실험(2017.9.3), 마지막이 핵무력정책법 채택(2022.9.8) 순서이므로 정확하다.

③ X
- 틀린 부분: (나)를 가장 앞에 두고, 2016년 사건들인 (가)와 (라)를 그 뒤에 배치하였다.
- 이유: 북한의 6차 핵 실험은 2017년 사건이므로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와 안보리 결의 2270호보다 먼저 올 수 없다.
- 올바르게는: 2016년 사건인 (가), (라)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 (다)가 이어진다.

④ X
- 틀린 부분: (라)를 (가)보다 앞에 두었다.
- 이유: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16년 3월 2일 채택이고, 개성공단 폐쇄는 2016년 2월 10일이므로 (가)가 (라)보다 앞선다.
- 올바르게는: (라) → (가)가 아니라 (가) → (라)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2016년에 연속으로 발생한 (가)와 (라)의 순서를 뒤집는 데 있다. 둘 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뒤에 나온 대응 조치이므로 같은 묶음으로 기억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성공단 폐쇄가 먼저이고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이 그다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형 문제는 사건을 연도 단위로 먼저 크게 나눈 뒤, 같은 연도 안에서는 월과 일을 비교하면 된다. 이 문항은 2016년 사건 두 개, 2017년 사건 한 개, 2022년 사건 한 개로 묶은 다음 2016년 내부의 2월과 3월 순서를 비교하면 바로 정답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개성공단 폐쇄 2016년 2월, 결의 2270호 2016년 3월, 6차 핵실험 2017년 9월, 핵무력정책법 2022년 9월 순서이다.

NoteBase

문 20. 국제사회의 인권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북한인권법'은 미국→일본→한국 순서로 제정되었다.

② 평등권, 참정권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국제인권 A규약에 해당한다.

③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 순서로 채택되었다.

④ 한국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인권 A·B규약의 구분과 주요 인권조약 및 북한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가입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구분

국제인권 A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제인권 B규약에 해당한다.
북한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 순서는 미국 2004년 → 일본 2006년 → 한국 2016년이다.

올바른 순서

주요 인권조약의 채택 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 고문방지협약 1984년 → 아동권리협약 1989년이다.
왜 이 순서인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이 1979년, 고문방지협약이 1984년에 채택되므로 두 조약의 선후만 바로 잡아도 ③의 오류를 판별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미국의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는 2004년, 일본의 대북 납치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은 2006년,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제정 순서가 미국 → 일본 → 한국으로 맞다.

② X
평등권, 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제인권 B규약(ICCPR)의 내용이다. 국제인권 A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룬다.
틀린 표현: "국제인권 A규약"
올바른 표현: "국제인권 B규약"

③ X
조약 채택 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고문방지협약 1984년, 아동권리협약 1989년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순서를 뒤바꾸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인종차별철폐협약 → 고문방지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아동권리협약"
올바른 표현: "인종차별철폐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고문방지협약 → 아동권리협약"

④ X
한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지만, 인종차별철폐협약에는 1978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1984년에 이미 가입하였다. 따라서 1991년 이후에 이들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서술은 틀리다.
틀린 표현: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올바른 표현: "한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나,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78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84년에 이미 가입하였다"

오답 포인트

②는 A규약과 B규약의 대응을 바꿔 놓은 전형적 함정이고, ③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채택 순서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④는 한국의 유엔 가입 시점과 개별 인권조약 가입 시점을 한 덩어리로 기억할 때 쉽게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인권사 문제는 먼저 A규약=경제·사회·문화권, B규약=시민·정치권을 고정하고, 그다음 연표 문제는 가장 이른 것과 가장 늦은 것부터 잡아 중간 순서를 대조하면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이고, 북한인권법은 미 2004 → 일 2006 → 한 2016 순서이다.

NoteBase

문 21.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ㄴ. 통일국가 형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ㄷ. 통일국가의 실현 절차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통일국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ㄹ. 통일과정으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성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원칙, 통일과정, 남북연합과 통일국가의 제도적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아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남북연합은 과도체제로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는 단계이고, 통일국가는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총선거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1체제 1정부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ㄱ의 틀린 표현은 '민족 대단결'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다. ㄴ의 틀린 표현은 '통일국가 형태로 2체제 2정부'이다. 2체제 2정부는 남북연합 단계의 과도체제이고, 통일국가는 1체제 1정부이다.
② X: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ㄱ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 아니라 자주·평화·민주로 고쳐야 한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ㄴ은 통일국가 형태를 2체제 2정부로 본 점이 틀렸고, 남북연합 단계가 2체제 2정부이며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통일정부·통일국회가 구성되는 1체제 1정부이다.
④ O: ㄷ과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ㄷ은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총선거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했다. ㄹ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정확히 제시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남북연합 단계의 '2체제 2정부'를 최종 통일국가의 모습으로 착각하는 점과, 통일원칙의 '민주'를 '민족 대단결'로 바꾸어 기억하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먼저 원칙이 자주·평화·민주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남북연합은 과도체제 2체제 2정부, 통일국가는 최종단계 1체제 1정부인지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평민 원칙, 화남통 3단계, 연합은 2정부, 통일은 1정부이다.

NoteBase

문 22. 동맹 결성을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
(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다)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소동맹) 체결
(라)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중동맹) 체결

① (가)→(나)→(다)→(라)
② (나)→(가)→(라)→(다)
③ (나)→(라)→(다)→(가)
④ (다)→(가)→(라)→(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냉전기 동아시아 주요 양자동맹의 체결 시점을 연도와 세부 날짜까지 구분해 올바른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가) 미일안전보장조약 체결 - 1951년 체결이다.
2. (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1953년 체결이다.
3. (다)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 1961년 7월 6일 체결이다.
4. (라)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 1961년 7월 11일 체결이다.

왜 이 순서인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먼저이고, 1961년의 두 조약 가운데서는 조소동맹이 조중동맹보다 닷새 먼저 체결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 1951년 → (나) 1953년 → (다) 1961년 7월 6일 → (라) 1961년 7월 11일의 흐름이므로 시기가 이른 순서에 맞다.

② X
틀린 부분: (나)를 (가)보다 앞에 두고, (라)를 (다)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 (나) → (다) → (라)이다.

③ X
틀린 부분: (나)를 맨 앞에 두고, (라)를 (다)보다 앞에 두며, (가)를 맨 뒤로 보낸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 (나) → (다) → (라)이다.

④ X
틀린 부분: 1961년의 (다)를 1951년의 (가)보다 앞에 두고, 1953년의 (나)를 맨 뒤에 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 (나) → (다) → (라)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조소동맹을 1950년의 중소동맹과 혼동하는 점과, 조소동맹·조중동맹이 모두 1961년에 체결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선후 날짜를 놓치는 점이다. 이 문항에서는 조소동맹이 1961년 7월 6일, 조중동맹이 1961년 7월 11일이라는 세부 순서가 정답을 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맹 연표 문제는 먼저 각 조약의 기준 연도를 고정한 뒤, 같은 해에 묶이는 항목만 일자 순서로 다시 비교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1951년 미일, 1953년 한미, 1961년 조소·조중의 세 덩어리로 나눈 뒤 마지막 둘의 7월 6일과 7월 11일을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미일 1951, 한미 1953, 조소 1961.7.6, 조중 1961.7.11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23.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주의적 제도로 배출권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국가별 기여 방안의 제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③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과 캐나다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과 관련하여 하향식(top-down)방식을 채택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방식을 채택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감축 거버넌스 방식, 그리고 2012년 COP18의 교토체제 연장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의무를 국제적으로 배분하는 하향식 체제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여 각국이 스스로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체제이다.
2012년 COP18 도하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두었지만, 일본은 새 공약기간의 감축의무를 맡지 않았고 캐나다는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상태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였고, 대표적인 수단이 배출권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이다. 선지는 교토의정서의 대표 제도를 정확히 적었으므로 맞다.
② O: 파리기후변화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제출하는 구조이다. 감축목표를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해 제출하고 이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지의 취지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일본과 캐나다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교토의정서 연장에 일본은 제2차 공약기간의 감축의무를 수락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2011년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다. 올바르게는 'COP18에서 교토의정서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일본과 캐나다는 그 연장 체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감축목표 설정방식만 비교하면 교토의정서는 국제사회가 의무를 정해 배분하는 하향식 성격이 강하고, 파리협정은 각국이 NDC를 정하는 상향식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선지 내용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COP18의 '교토 연장'과 '주요국의 실제 참여'를 같은 의미로 보면 ③에 속기 쉽다. 연장은 합의되었지만 모든 선진국이 새 공약기간에 들어온 것은 아니며, 일본과 캐나다를 참여국처럼 묶은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후변화 거버넌스 문제는 먼저 '누가 감축목표를 정하는가'를 본다. 국제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배분하면 교토의정서, 각국이 NDC를 제출하면 파리협정이다. 그다음 회의 결과를 묻는 선지는 합의의 존재와 실제 참여국 범위를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토=선진국 중심·하향식·법적 감축의무, 파리=전 당사국·상향식·NDC이다. 도하 연장=2020년까지이지만 일본·캐나다의 적극 참여는 아니다.

NoteBase

문 24.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자르, 란다우를 회복하였다.

② 국제연맹의 지도하에 산둥반도와 독일령 남양제도에 대한 일본의 위임통치가 결정되었다.

③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통해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로잔 조약을 통해 튀르키예는 동부 트레이스를, 그리스는 임브로스와 테네도스를 제외한 에게 제도(Aegean Islands)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베르사유 조약, 국제연맹 위임통치, 사이크스-피코 협정, 로잔 조약이 각각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본토와 식민지의 처리, 배상, 국경 조정을 정한 제1차 세계대전 후 평화조약이다.
국제연맹 위임통치는 패전국 식민지를 국제연맹 감독 아래 승전국이 통치하는 제도이며, 위임 대상 지역이 따로 정해진다.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오스만 제국의 아랍 지역을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권으로 나누려 한 비밀협정이다.
로잔 조약은 세브르 조약을 대신하여 튀르키예의 국경과 해협·도서 문제를 다시 정리한 조약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자르, 란다우를 회복하였다'이다. 알자스-로렌은 프랑스로 반환되었지만 자르는 곧바로 프랑스 영토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국제연맹 관리 아래 놓였고 프랑스는 자르 탄광에 대한 권익을 확보하였다.
② X: 틀린 부분은 '산동반도와 독일령 남양제도에 대한 일본의 위임통치'이다. 일본의 위임통치 대상은 독일령 남양제도였고, 산동반도는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이 아니라 독일의 권익이 일본에 이전된 문제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통해 ... 유대 국가를 창설'이다.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 분할 협정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민족적 고향을 지지한 것은 밸푸어 선언이다.
④ O: 로잔 조약에서는 세브르 조약의 가혹한 조건이 수정되었고 튀르키예의 동부 트레이스 회복과 임브로스·테네도스를 제외한 그리스의 에게 해 도서 보유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전후 국제질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뭉뚱그려 외우면 오답이 된다. ②는 '위임통치'라는 제도와 '산동반도 처리'를 섞었고, ③은 '사이크스-피코'와 '밸푸어 선언'을 뒤섞은 점이 대표적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후 조약 문제는 먼저 문장 속 핵심 명사를 조약별로 분리해 판단한다. 영토 반환인지, 국제연맹 위임통치인지, 중동 분할 약속인지, 튀르키예 국경 재조정인지를 가르면 선지의 진위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이크스-피코는 중동 분할, 밸푸어는 유대 민족 고향 지지, 자르는 국제연맹 관리, 로잔은 튀르키예 국경 재정리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25.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과 중국 모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②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체와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다.

③ 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중국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④ 중국은 역사적 관할권을 근거로,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난사군도/쯔엉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아시아 영토분쟁별 영유권 주장 근거와 조약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평의 원칙은 해양경계 획정에서 관련 사정을 종합해 형평한 선을 찾는 접근이다.
중간선·등거리 원칙은 양국 해안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접근이다.
고유영토론은 해당 영토가 역사적으로 본래 자국 영토였다는 논리이다.
남중국해 군도 분쟁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권원, 점유의 계속성, 국가승계 같은 근거가 함께 문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한국과 중국 모두 형평의 원칙"이다. 이어도는 수중암초이므로 영토주권 자체보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핵심이다. 한국은 대체로 중간선·등거리 원칙을,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내세운다. 올바르게는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한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쿠릴열도 전체"이다.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이 확보한 것은 남부 사할린이며, 쿠릴열도 전체를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다"이다.
③ O: 중국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 본래 중국 영토였다는 고유영토론, 곧 역사적 권원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한다. 선지의 진술은 중국의 대표적 주장 논리를 정확히 짚고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이다. 난사군도/쯔엉사군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거리보다 역사적 자료, 점유의 계속성,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부터의 국가승계 같은 근거가 중심이 된다. 올바르게는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베트남도 역사적 권원과 점유·국가승계 논리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이어도 분쟁을 영토분쟁처럼 단순화하면서 한국까지 형평의 원칙으로 묶은 점이 함정이다. ②는 포츠머스 조약과 쿠릴열도 문제를 한데 섞은 진술이다. ④는 남중국해 분쟁을 거리 문제로 오해하게 만드는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토분쟁 선지는 먼저 분쟁 대상이 영토인지 해양경계인지부터 가른다. 이어도처럼 수중암초가 나오면 해양경계 원칙을 떠올리고, 조약이 나오면 실제 양도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센카쿠·난사군도처럼 군도 분쟁이 나오면 각국이 내세우는 역사적 권원과 점유 논리를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어도는 중간선 대 형평, 포츠머스는 남사할린,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영토론이다.

NoteBase